

1950년대 중후반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의 전개와 성격: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김도민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본고는 1950년대 냉전의 최전선이자 ‘주변부’이던 남·북한이 또 다른 냉전의 주변부이자 탈식민 신생국이던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중립국’들에 대해 어떠한 대외정책을 펼쳤는지를 밝혔다. 1956년 국내외의 복잡한 상황이 정리됨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한 북한 지도부는 1957년부터 비사회주의의 ‘중립국’들에 대한 ‘양자외교’를 펼쳐 나갔다. 그 결과 1957년 북한은 처음으로 비사회주의의 ‘중립국’ 인도네시아·인도·버마·이집트 등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남한 정부는 1957년 커져가는 유엔발 외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친선사절단을 ‘중립국’이 포함된 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처음으로 파견했다. 흥미롭게도 남·북한 모두 1957년 방문한 동남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탈식민 중립국들에서 식민경험에 주목했다. 이처럼 1957년 실행된 남·북한 ‘중립국’ 외교의 시작은 북한이 무역협정 및 문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극성을 보인 반면 남한은 유엔에서 발생한 위기에 대응하는 수동적 성격이 컸다.

주제어 냉전, 탈식민, 중립국, 외교정책, 식민경험, 민족주의

I. 머리말

1945년 8월 15일 이후 일제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한반도에는 ‘해방의 공간’과 ‘점령의 시간’이 펼쳐졌다. 탈식민으로 들끓던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과 소군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을 각각 분할점령했다(정용욱, 2018). 연합군으로 일분군과 함께 싸웠던 미·소는 1947년부터 세계를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11675). 또한 이 논문은 본 연구자가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의 서론 일부와 제2장의 “1-2) 1957년 ‘상이한 사회제도’의 나라들과 양자외교의 시작” 및 “2-2) 1957년 유엔총회의 위기와 ‘중립국’ 방문외교의 시작”에 근거하여 작성했음을 밝힌다. 특히 익명의 심사위원들의 소중한 논평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진영'이라는 양극적(兩極的, bipolar) 냉전질서로 분할해 나갔다. 지구적 냉전(global cold-war)과 맞물려 냉전의 최전선(最前線) 한반도에서는 1948년 남과 북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적대적인 분단정부가 수립됐다. 1950년 6월 25일 탈식민과 냉전, 그리고 분단이 교차하던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양극적 냉전질서는 한반도에서 발발한 열전(熱戰)으로 더욱 견고해지는 듯했다.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 적대적인 양극적 냉전의 한쪽 편에 서기를 거부하며 '반식민(反植民)·평화·중립'을 주창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다.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기를 거부한 세력의 상당수는 식민지에서 갓 벗어난 신생 독립국들이었다. 1955년 인도네시아 반등에서 열린 냉전 시기 최초의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는 반식민·평화·중립을 지향하며 냉전의 이분법적 편가르기를 거부하는 '제3세력'의 집단적·조직적 현실화였다. '제3세력'을 주도하는 '중립국'들에 대해 1957년 남·북한 정부는 공히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새로운 대외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남한과 북한은 왜 1957년 '중립국'들과 외교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남·북한은 실제 어떠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이처럼 본고는 냉전의 최전선이자 '주변부'이던 남·북한이 또 다른 '주변부'이자 탈식민 신생국들이 대다수이던 동남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중립국'들에 대해 어떠한 대외정책을 펼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북한과 남한이 각각 1957년 실질적으로 '중립국' 외교에 나서게 되는 역사적 맥락을 1956년을 기점으로 살펴본 후, 이어서 1957년 남·북한이 펼친 구체적인 외교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로써 기존 연구들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1957년이야말로 남·북한 외교에서 중요한 분기점임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방법론으로서 남·북한의 여러 주체가 생산한 1차사료를 정리함으로써 남북한 정부의 '중립국' 외교정책의 형성과 실행의 구체적인 맥락을 밝히고자 했다. 나아가 본 논문은 '시차적(Parallax) 사료교차'를 최대한 견지했다(신옥희·권현익 엮음, 2019: 124-125). '시차적 사료교차'란 다양한 주체가 생산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동일한 사건에 교차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차적으로 사료에서 드러난 남·북한 혹은 상대국의 시각을 내재적으로 실증할 필요는 존재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또다시 냉전의 승자를 따

지는 당대 사료의 주장을 답습할 위험이 크다. 동일한 사건을 둘러싸고 남한과 북한은 왜 다른 시각을 견지했는지, 적극적으로 남·북한 그리고 다른 주체들의 시각을 교차해야만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북한에서 생산한 자료는 모두 정부가 생산한 문서뿐이기 때문에 외부적 시선을 확보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한정된 북한의 자료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본고는 우드로윌슨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가 국제냉전사프로젝트(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CWIHP)의 일환으로 수집하여 번역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했다.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의 시작을 밝히고자 하는 본 연구는 최근 신옥희·권현익(2019: 머리말)이 강조한 대로, “냉전이 세계적으로 전개되기는 했지만 지역적으로 다양한 형식과 관례로 이루어진 체계”였으며 “냉전에 대한 전체론적 추상에서 벗어나 개별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역사적 실상에 주목”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본 논문은 탈식민 신생국이자 냉전의 규정력이 강하게 작동하는 냉전의 '주변부' 남·북한이 냉전의 이분법적 규정력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또 다른 냉전의 '주변부'이던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의 '중립국'들과 맺었던 대외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탈식민과 냉전의 '교차'를 살펴보는 데 유용하리라 기대한다.

둘째, 최근 냉전사 연구가 냉전의 '중심부'와 '중심부'에서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부'와 '주변부'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¹ 따라서 본 연구는 냉전의 '주변부'와 '주변부'를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냉전사 연구들과 다른 층위의 냉전 경험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셋째, 본 논문은 남한과 북한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현대사를 다루는 역사학이든 사회과학이든 문학이든 대체로 한국 학계는 남·북한을 각기 다른 연구 영역으로 취급하여 따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다 보니 냉전기 남·북한은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였음에도, 동시대적 사건에 대해 남과 북 반쪽짜리 시각에 머문 채 한반도적 차원의 시야를 가지지 못했다. 남·북한 통합

¹ 냉전사 연구의 현황은 김도민(2020: 서론)을 참고할 것.

적 시야를 통해 기존에 소홀히 다뤄진 남·북한의 비교사와 관계사의 영역을 개척하고자 한다.

넷째, 본 논문은 비록 1957년 전후 시기를 다루고 있지만, 최근 문재인 정권이 주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 일정한 역사적 ‘성찰’을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1957년 이승만 정권은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친선사절단’을 동남아시아 지역 ‘중립국’들에 파견했다. 그런데 당시 동남아시아 핵심 ‘중립국’이던 인도만큼은 배제시켰다. 왜 당시 이승만 정권은 인도를 유독 배제했을까? 또한 처음으로 동남아시아 ‘중립국’들에 사절단을 파견할 당시 남한의 외교관들은 방문한 국가들에서 어떠한 인식을 가졌을까? 냉전기 동남아시아 ‘중립국’에 대한 외교관들의 첫 대외활동의 역사적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현재 문재인 정권이 선도적으로 주창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일정한 역사적 ‘혜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²

끝으로 본고가 지칭하는 ‘중립국’이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냉전 시기 두 진영의 어느 한편에 서기를 거부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중립화·중립·중립주의·비동맹 등이 있다. 먼저 중립화(neutralization)란 주변국들이 해당국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해당국은 외국군의 주둔을 허용치 않으며 외국군과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 국제관계 설정을 의미한다(홍석률, 2004: 53). 다음으로 중립(neutrality)은 전쟁에서 한쪽 편에 서지 않는다는 오래된 개념이었다. 냉전 이전에 한반도에서는 1904년 1월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평화가 결렬될 경우 대한제국은 ‘엄정중립’을 지키겠다는 ‘전시중립선언’이 있었다(서영희, 2018: 583). 냉전 시기 중립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의 논쟁에 ‘동등하게 불참(impartial nonparticipation)’한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강했다(Thomas, 2001: 73). 예를 들어 한국전쟁 이후 정전체제를 관리할 임무를 맡아 설치된 ‘중립국감시위원회’에 사회주의 진영의 국가인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도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했다.

² 김영선(2020)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에서 특히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상호존중”을 강조했다. 서로에 대한 이해의 기본은 과거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역사적 이해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소극적 의미의 오래된 개념으로서 중립과 달리, 1950년대 새롭게 등장한 중립주의(neutralism)와 비동맹(nonalignment)이라는 용어는 냉전의 두 진영 간 적대적인 이분법적 대립을 지양하며 '평화'를 달성하려는 적극적인 일련의 흐름을 지칭했다. 물론 중립주의·비동맹을 추구하는 국가들도 시기별·사건별로 적극성의 차이는 존재했다. 그럼에도 국제협정이 보장하는 중립화와 논쟁에 불참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중립과는 달리, 세계정치의 '제3세력'으로 양극적 냉전질서를 바꾸고자 하는 새로운 흐름을 지칭할 때 이를 중립주의 혹은 비동맹이라 불렀다. 이에 본고는 1950년대 냉전 시기 어느 한 편에 서기를 거부하며 중립주의·비동맹을 적극적으로 추구했던 국가들을 따옴표를 붙인 '중립국'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사실 남·북한 정부는 중립주의(비동맹)를 지향하는 동일한 국가를 지칭할 때도 자신의 위치에서 상이한 용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만약 남·북한의 두 주체를 동시에 서술하면서 어느 일방의 용어만을 사용한다면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실제 남·북한이 당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사용하던 용어와 구별하기 위해 중립주의 및 비동맹을 추구하는 국가들을 따옴표를 붙인 '중립국'이라 표기했다(김도민, 2020: 4-6).

II. 북한의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

1. 1956년 '상이한 사회제도'의 나라들과 대외활동 결정

1954~1955년 시기에도 북한의 주요 인사나 『로동신문』은 상이한 체제의 국가들과 대외관계를 맺겠다고 밝혀 왔지만 최종적으로 1956년 4월 23~29일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중립국' 관련한 새로운 대외정책을 제시했다.

김일성은 제2차 당대회 이후 진행된 8년간의 국제정세의 “거대한 변동들” 중 1956년 2월 열린 소련 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언급했다. 그는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흐루쇼프가 주장한 '평화 공존론'이 세계 인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을 뿐 아니라 세계 평화옹호운동이 더욱 광범하게 양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일성이 보기에 소련을 위시한 평화세력과 달리 미국은 군사기지·군사동맹·

군비확장을 시도하며 전쟁방화를 일삼는 ‘제국주의’였다.

이어 김일성은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은 “상이한 사회경제체제의 평화적 공존 가능성”에서 출발하여 “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기초로 한 모든 나라들 간의 친선과 정치·경제·문화적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김일성은 구체적으로 최근 사회주의 진영의 두 거두인 소련과 중국이 인도·버마 등과 친선관계를 맺었던 사례를 제시했다.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이 앞장서서 상이한 체제와 대외관계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1955년 반동회의 개최 자체가 바로 진영외교를 넘어선 확장의 현실체라고 주장했다. 1956년 4월 23일 변화한 국제정세에 따라 김일성은 북한 대외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우리 당은 앞으로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위한 투쟁에 계속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이며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한 기타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들과의 형제적 친선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며 정치 경제 문화적 협조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레닌적 원칙을 견지하며 자주권의 호상 존중과 평등권에 입각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 애호 국가들과의 정치적 및 실무적 연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아세아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침략과 일본 군국주의의 재생을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할 것이며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 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도, 비르마[버마_인용자], 인도네시아, 일본 인민들과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하며 기타 아세아 인민들의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준엽 편, 1974: 684)

김일성은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레닌적 원칙을 견지하며 자주권의 호상 존중과 평등권에 입각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 애호 국가들과의 정치적 및 실무적 연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북한 대외정책이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 중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 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도·버마·인도네시아·일본 등 기타 아세아 인민들과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김일성은 “형제적 친선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한다는 전제, 즉 사회주의 진영이 더욱 강화된 바탕에서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과의

외교확장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1948년 제2차 당대회 시기 사회주의 진영외교만 제시했던 김일성의 총화보고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유연해진' 대외정책이었다. 1956년 4월 28일 조선로동당은 김일성이 제시한 새로운 대외정책을 다음과 같이 「로동당 규약」에 명문화했다.

제1장 당

1. 조선로동당은 우리나라 노동 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다. (...) 조선로동당은 당원들과 근로대중을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조선 인민과 위대한 소련 중국 및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 인민들과 모든 나라 근로자들과의 국제주의적 단결을 공고히 하며 우리나라의 통일 독립을 지지 성원하는 모든 나라들과 일체 평화애호 인민들과의 친선을 강화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투쟁한다. (...) (김준엽 편, 1974: 817-818)

「로동당 규약」은 김일성이 제시한 진영외교에 기반한 외교확장의 논리 구조를 그대로 따랐다. 다만 「로동당 규약」은 김일성이 언급한 '상이한 사회제도'라는 표현 대신 "평화애호인민들과의 친선 강화"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적시됐다.³ 이렇게 1956년 김일성은 사회주의 진영 이외의 상이한 사회제도의 국가들과도 대외관계를 맺겠다는 새로운 대외정책을 제시했다. 김일성은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아시아 국가들과 대외관계를 확장함으로써 북한이 '아시아 반식민 민족해방투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북한은 곧바로 비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위한 대외활동에 나서지 못했다. 왜냐하면 1956년 하반기 북한은 국내외적으로 스탈린격하운동, 8월전원회의 사건, 중국과 소련의 내정간섭, 헝가리혁명 등 혼란한 상황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56년 말 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됐으며 이어 북소관계가 개선되고 1956년 11월 모택동이 중국 인민지원군을 북한으로부터 철수한다고 표명함으로써 북한 지도부의 자율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자율성'을 바탕으로 북한 지도부는 1956년 11월 하순 지방권력기관 선거를 실시했으며,

³ 이종석(1995: 68)은 「로동당 규약」에 대해 "최소강령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북조선 로동당의 최종 목적과 그를 위한 수단을 규정한 일반 강령"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12월부터 1957년 초까지 당원증 교환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내부 준비에 힘썼다(선즈화, 2017). 이처럼 1957년 초에 이르러 북한 국내외의 복잡한 상황들이 상당히 해소됐다. 또한 1957년 초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5개년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들과 경제협력이 절실하기도 했다.

2. 1957년 비사회주의 국가들과 ‘양자외교’의 실행과 성과

1957년 4월부터 북한은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비사회주의의 국가인 인도·인도네시아·버마에 무역 대표단을 파견하여 양자적 통상관계 수립을 모색했다. 북한의 방문외교는 어떤 대표단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대표단 명칭에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정부 친선대표단’ ‘조선로동당 대표단’ 같은 당 및 정부 기관 명칭을 붙인다면 방문 대표단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 비록 당 및 정부 기관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정부 관료가 포함된 경제 및 통상 대표단이 다음으로 급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보통 무역성과 재정성 부상 및 부국장 등이 단장으로서 대표단을 이끈다. 이상의 정부 차원과 달리 민간 차원으로 친선대표단, 과학·문화·출판·보도 등 부문별 대표단이 타 국가 및 단체를 방문하기도 한다(『조선중앙년감: 1965년판』, 487-490).

1957년 4월 중순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the DPRK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Trade) 대표단이 인도네시아 방문을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 동 대표단은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부위원장 김최선을 단장으로 하는 4명으로 구성됐다(로동신문 57/04/20). 1957년 5월 9일 북한 대표단은 경제위원회 위원장 코사시 푸르와네가라를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대표단과 통상회담을 시작했다(로동신문 57/05/11). 1957년 5월 15일 양국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은 인도네시아에 아연, 강철, 시멘트, 유리, 화학 비료 및 견사를 수출하며 인도네시아는 고무, 차, 야자유, 식물성유, 키니비, 커피, 재목 및 기타 물품들을 수출하기로 합의했다. 1957년 5월 16일 대내외 상업상 진반수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무역 대표단이 인도 및 버마와 통상관계 수립을 위해 국제열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했다(로동신문 57/05/17). 6월 5일 북한 무역 대표단은 인도 상공상 모라르지 데사이와 회담하고 통상관계 설정에 대해 토의했다(로동신문 57/06/08). 그런데 북한과 인도 간

통상회담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7월 11일 『로동신문』은 양국 대표단 간의 회담이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으며 곧 통상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는 진반수의 발언을 인용보도했지만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었다(로동신문 57/07/11).

평양 주재 동독 대사와 외무성 부상 박성철이 1957년 12월 10일 나눈 대화에 따르면, 인도와 회담의 어려움은 협상 주체의 ‘위상’ 문제에서 발생했다. 인도는 정부 차원에서 협상은 진행될 수 있지만 어떤 정치적이거나 심지어 무역 협정(trade agreement)도 정부 차원의 서명을 거부했다. 인도는 북한과 협상들은 계약을 확립하는 목적인 뿐이며 협정은 무역 기구(trade organizations)의 서명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북한은 협정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 차원의 협상을 유지하자고 인도에 요구했다. 두 달에 걸친 긴 협상 끝에 북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성철은 동독 대사에게 인도가 통상무역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인 이유를 ‘제국주의 국가들’의 보복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철이 보기에 인도는 북한과 무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미국·서독·영국·일본 등과 협정을 체결한 상대였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북한과 무역협정이 이들 국가들의 보복을 낳을까 두려워했다. 결국 양측의 협상은 정부 차원이 아닌 외국 무역(foreign trade)의 회계를 북한이 인도 내 계좌를 개설하는 민간 차원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귀결됐다. 박성철은 앞서 인도네시아 협상보다 인도 협상이 더 힘들게 진행됐다고 회고했다(Wilsoncenter, 1957).

1957년 8월 19일 인도 뉴델리에서 북한 무역 대표단과 인도 국영 무역 회사는 「양국간의 무역을 촉진시킬 데 대한 서한」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북한 국영 무역 기관의 대표가 뉴델리에 파견될 것이었다(로동신문 57/08/25). 이처럼 북한이 바라는 정부 차원의 무역 협정이 아니라 인도 국영 무역 회사라는 민간 차원에서 협상이 체결됐다.

이어 북한 무역 대표단은 인도를 떠나 버마에 도착한 후, 버마 정부의 고위급 대표들과 협상을 가졌다. 1957년 10월 2일 북한 무역 대표단과 버마 ‘연방 무역 발전성’은 수도 랑군에서 「양국간의 무역을 촉진시킬 데 대한 서한」을 교환했다. 교환된 서한은 양국 간의 “경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쌍방이 무역 대표를 호상 상대국 수도에 주재”시킬 것을 명시했다(로동신문 57/10/08). 북한 무역 대표단

은 인도와 비교하면 정부 수준에서 버마와 무역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달성한 셈이었다. 그런데 박성철은 동독 대사에게 처음 버마에 북한 대표가 방문했을 때 환영 나온 사람이 없었을 뿐 아니라 버마 측에서는 자국을 방문 중인 미국·영국·이스라엘 등의 대표들을 고려하여 북한 대표와 만남을 비밀로 하길 원했다고 말했다. 다행히 그는 이후 버마의 우누 대통령을 만났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동독 대사에게 밝혔다(Wilsoncenter, 1957).

북한은 인도네시아·인도·버마뿐 아니라 이집트와도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1957년 9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차 회의에서 김일성은 이집트와 “경제적 및 문화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로동신문 57/12/11; 서동만, 2005: 586). 1957년 12월 6일 상업성 무역 차관보 모스타파 칼리파를 단장으로 하는 총 18명으로 구성된 이집트 정부무역 대표단이 ‘1958년도 양국 간 무역협정’의 체결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 북한 대내외 상업성 부상 김최선, 외무성 제2부장 양영순 등이 평양역 앞으로 마중을 나갔다(로동신문 57/12/07).

12월 9일 김일성은 이집트 정부 무역 대표단 전원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평화를 고수하며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양국 인민들의 친선이 보다 강화될 데 대하여서와 동 대표단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했다. 모스타파 칼라파 단장은 김일성에게 이집트 “인민들이 식민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던 가장 준엄한 시기에 조선 인민이 보내 준 지극한 동정과 지지는 조선 인민의 따뜻한 우정의 표징”이었다고 감사를 표했다(로동신문 57/12/10).

1957년 12월 10일 북한과 이집트 정부 간에 무역협정 및 지불협정이 평양

에서 조인됐다. 협정에 따라 북한은 이집트에 각종 강재, 전기 연, 전기 아연, 류안 비료, 카바이드, 흑연, 마그네슘크링카, 산화연, 나후타링, 옥수수 콘스타치, 건어 및 염장어, 어간유, 호뿌, 인삼, 견직물 및 기타 제품을 납입하며, 이집트는 북한에 조면, 면사, 면직물, 인견사, 인견 봉사, 인견 직물, 염료, 향료, 양모 직물, 피혁, 피혁 제품, 린회석, 망강, 석고 및 기타 제품들을 납입하기로 했다(로동신문 57/12/11).



그림 1 김일성 수상의 이집트 무역대표 접견

표 3 1957년 북한의 비사회주의 국가들과 무역협정 체결 현황

상대국	기간(체결일)	단장	방문 및 초청 결과
인도네시아	4월중순~(5.17)	조선국제무역 촉진위원회 부위원장 김최선	통상협정 체결
인도	5.16~(8.19)	대내외 상업상 진반수	무역 촉진 서한 교환
버마	?~(10.2)	대내외 상업상 진반수	무역 촉진 서한 교환
이집트	12.6~(12.10)	무역 차관보 모스타파 칼리파	정부 간 무역협정 및 지불협정 체결

이상 1957년 북한이 비사회주의의 국가들을 방문하거나 초대하여 체결했던 무역협정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로동신문』은 네 ‘중립국’과 통상관계 설정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 관련 논평을 실었다. 여기서 『로동신문』은 먼저 네 국가와 통상관계를 설정한 것에 대해 “정치 사회 제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나라들과 평화적 공존 정책에 립각하여 친선 협조 관계를 설정 발전시키려는” 북한 “정부의 시종일관한 평화애호적 대외정책이 거둔 또 하나의 결실”이라 평가했다. 이어 『로동신문』은 네 국가뿐 아니라 “기타 아세아의 모든 나라들과도” 반동회의가 표방한 “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에 기초하여” “친선 협조 관계”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흥미롭게도 『로동신문』은 네 나라들과 북한의 공통점을 ‘식민 경험’에서 찾았다. 특히 북한은 이들 나라가 모두 현재 모두 식민주의 기반으로부터 해방되어 독자적 발전의 길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면서 동시에 이 신생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예속화하려는 서방 제국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로동신문 57/05/17; 57/08/25; 57/10/08; 57/12/11). 『로동신문』은 아세아의 평화적 공존이 확립된다면 이는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의 ‘원동력’이 된다고도 주장했다. 즉 『로동신문』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이 사회주의 진영 이외의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적·문화적 관계의 강화를 낳았을 뿐 아니라 현재의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촉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한다고 강조했다(로동신문 58/09/06). 이처럼 북한은 아시아·중동 지역의 ‘중립국’들과 관계개선을 통해 반식민과 냉전 그리고 분단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리라 기대했다.⁴

⁴ 1957년 양자적 경제협력뿐 아니라 양자적 문화교류도 처음으로 시작했다. 1월 인도에 인도-조

1958년 1월 11일 박성철 외무성 부상은 『로동신문』에 「공화국 정부의 대외정책의 기초」라는 글에서 먼저 1956년 확정된 사회주의 진영에 기반한 ‘상이한 체제’로의 외교영역 확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그는 1957년 한 해 동안 북한은 “대외정책 분야에서 우리와 친선 관계의 유지를 희망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관계를 정상화하며 경제 문화적 교류와 실무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외교성적을 정리했다. 이처럼 1957년 북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냉전의 어느 진영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비사회주의 국가들과 경제적·문화적 양자외교를 펼쳐 나갔다. 양자외교 결과 1957년 한 해 동안 북한은 인도·인도네시아·버마·이집트 등 총 4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했을 뿐 아니라 인도와 북한 양국에 문화협회를 창립하는 등 상당한 외교적 성과를 달성했다(로동신문 58/01/11).⁵

III. 남한의 소극적인 ‘중립국’ 외교

1. 1955~1956년 유엔총회 위기와 커져 가는 ‘중립국’ 외교강화론

1954년부터 새롭게 등장하는 ‘중립국’들에 대해 남한 정부는 강화된 진영외교로서 ‘제3세력’에 대응했다. 예를 들어 1954년 7월 15일 국회에서 자유당 최

선 문화협회가 창립했다(로동신문 57/01/02). 같은 해 5월 북한에는 조선-인도 문화협회가 창립됐다(로동신문 57/05/09). 창립한 조선-인도 문화협회는 “조선 인도간의 문화교류를 위한 당면한 문제를 토의하며 양국 인민들 간의 친선을 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인도-조선 문화협회 대표단에 6, 7월 조선-인도 문화협회 방문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냈다(로동신문 57/05/17).

⁵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 아시아·중동 지역의 ‘중립국’들에 대한 경제적·문화적 차원의 양자외교를 펼쳤고 그 결과 여러 국가들과 무역협정 및 문화협정을 체결하였다. 북한은 인도네시아와 1958년 9월 인도네시아-조선 친선협회를, 11월 인도네시아-조선 친선협회를 각각 창립했다. 나아가 양국은 1959년 2월 “조선-인도네시아 친선협회와 인도네시아-조선 친선협회 간에 문화 협조에 관한 합의서와 1959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에 조인했다(로동신문 58/09/12; 58/11/11; 59/02/05). 1958년 1월 20일 북한과 시리아 간의 문화협정이 다마스쿠스에서 조인됐다(로동신문 58/01/23). 1959년 7월 23일 북한은 이라크와 통상 및 지불 협정과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을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조인했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 정부는 협정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상대방 수도에 영사 기능까지 보유한 무역대표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로동신문 59/07/26).

병권 의원은 국무총리이자 외무부 장관 변영태에게 제네바회담 결렬과 인도차이나 문제 등 아시아에 걸친 심각한 위기 상황을 언급한 후 이를 타개하기 위한 남한 외교활동에 대해 질문했다. 여기서 최병권은 “우방 각국에 친선사절단을 많이 파견”하거나 “자유국가 대표들”에 적극적인 외교방책을 펼칠 것을 요청했다.⁶ 1954년 ‘뉴델리 밀회사건’ 소동에서 드러났듯이 야당조차도 중립화를 주장하는 ‘제3세력’을 비판하기에 바빴다. 그런데 1955년 반동회의 전후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표결과 관련하여 남한 정부가 ‘중립국’ 외교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서히 등장했다.

1955년 10월 야당지 『동아일보』는 「외교진의 강화 급무」라는 주요한의 칼럼을 실었다. 주요한은 “원칙적으로” “비공산국가와 전부 외교관계를 수립”하자고 주장했다. 그가 보기에 최근 국제여론이 국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국제여론은 유엔총회의 표결과 직결되어 있었다. 그는 유엔총회에서 ‘의결권’은 대국이나 소국이나 모두 ‘한 표’임을 강조했다. 그는 강대국 프랑스가 유엔총회에 알제리문제를 상정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1955년 9월 30일 다수결에 따라 채택된 사례를 들었다. 그는 소련이 1955년 5월 오스트리아 강화조약에 조인한 것도 “세계 여론 앞에 굴복한” 것으로 해석했다(동아일보 55/10/28).

그는 세계여론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자유진영 각국에 상주대표단을 더 많이 설치하여 남한 정부 주장을 알리는 ‘공작’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기존 남한 정부의 진영외교 강화론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진영외교뿐 아니라 유엔총회에서 찬성표 확보라는 ‘실리’를 위해 ‘중립국’에 대한 외교 강화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공산측의 “평화선전”은 한국문제에 있어서도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평양방송과 북평방송은 매일과 같이 또는 수법을 여러 가지로 갈아가면서 민족통일을 위한 남북협상을 웨치고 있다. (...) 이러한 선전공세가 자칫 잘못하면 인도계열의 소위 중립로선국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전혀 부인할 수 없다 (...) 인도, 애급 기타의 소위 아랍·아시아 뿔럭은 종래의 단순한 중립노선

6 「제3대국회 제19회 국회입시회의속기록 제24호(1954.7.15)」, 38쪽.

에서 냉전에서 초월한다는 표를 던지고 있었으나, 반동회의 이래로 반식민주주의의 강화는 알제리 누기니아 사이프러스 등의 문제에서 의식적으로 반서방적인 표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략적 반서방노선이 한국문제에 파급될까 염려되는 바 있다. 그러므로 중립노선을 배제하고 이를 극복하든가, 적어도 우리에게 불리한 표가 증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아랍·아시아 각국에도 공식 또는 비공식의 사절단이 상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계여론에 중점을 두는 텔레스 씨의 발언을 주목하면서, 우리 외교진용의 강화와 확충을 주장하는 바이다.(밑줄은 인용자)(동아일보 55/10/28)

주요한은 인도·이집트 같은 ‘중립국’들이 ‘냉전을 초월’한다고 하지만 반동회의 이후 반식민주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유엔총회에서 ‘반(反)서방적 표’를 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요한은 ‘중립국’의 반서방노선이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표결까지 파급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남한 정부가 중립노선을 배제하거나 극복하지 못할 거라면, 최소한 유엔총회에서 남한에 불리한 표가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랍·아시아 지역의 ‘중립국’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한 정부는 1955년 후반 제기된 ‘중립국’ 외교 강화 여론을 무시한 채 진영외교로 일관했다. 예를 들어 1956년 11월 17일 조정환 외무부 장관 서리는 터키·필리핀·서독 등 자유진영의 해외 공관을 강화하는 예산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동아일보 56/11/18).

진영외교만을 고수하던 남한 정부는 제11차 유엔총회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해야 했다. 남한 정부는 매년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남한의 유엔가입을 신청해 왔다. 남한 정부는 1956년 동안 전국적으로 유엔가입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유엔가입추진위’ 지부가 전국의 도·군·면까지 설치됐다. 1956년 진행된 유엔가입서명운동 결과, 1,000만 명이 남한의 유엔가입을 호소하는 진정서에 서명했다. 1956년 12월 20일 천만 장의 진정서들이 유엔에 제출됐다. 유엔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의 서류였기 때문에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유엔본부에 전달하는 데만 무려 12대 이상의 트럭이 필요했다고 한다(동아일보 56/09/11; 56/12/22; 서울신문 56/12/12).

대대적인 유엔가입서명운동이 펼쳐지던 상황에서 1956년 11월 11일 제11차

유엔총회가 개최됐다. 1957년 1월 5일 조정환 외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번 유엔총회에서 남한의 유엔가입을 낙관적으로 본다고 말했다(동아일보 57/01/06). 1957년 1월 30일 유엔 특별정치위원회(Special Political Committee)에서 남한의 유엔가입안이 찬성 45표, 반대 8표, 기권 22표로 통과했다. 유엔가입안이 유엔총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표결 결과는 남한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왜냐하면 기권표가 무려 22표나 나왔기 때문이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상당수의 기권표를 지적하며 남한 정부가 아시아·아프리카 ‘중립국’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흥미롭게도 두 신문은 남한 정부가 아시아·아프리카 ‘중립국’ 외교를 펼칠 때 민족주의를 적극 활용하기를 주문했다. 왜냐하면 남한은 아시아·아프리카 ‘중립국’들과 같은 약소민족으로서 반식민이라는 민족주의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이었다. 즉 두 신문이 보기에 남한과 아시아·아프리카 ‘중립국’들은 “동병상련”의 처지에서 “민족자주” 혹은 “치열한 내셔널리즘”을 공유했다(동아일보 57/02/03; 경향신문 57/02/02).

2. 1957년 ‘중립국’에 대한 친선사절단의 파견과 배제된 인도

1957년 2월 남한 정부가 ‘중립국’에 친선사절단을 파견할 거라는 추측 보도가 있었지만, 조정환 외무부 장관은 파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매우 난색한 표정으로” “매우 데리케이트한 문제”라고 말할 뿐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1957년 2월 7일 『경향신문』은 남한 정부의 외교방침이 “전환”됐다는 근거로서 ‘중립국’ 오스트리아와 남한 정부가 국교수립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경향신문 57/02/08). 그러나 조정환 외무부 장관은 앞선 1957년 2월 2일 기자회견에서 오스트리아와 교섭은 진행 중이지만 이 국가는 “민주신홍 공화국가라고 전제할 다음 이미” 오스트리아에서는 “공산세력의 자취가 없으므로 국교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이지” “외교방침을 변경하여 중립국가와 국교수립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경향신문 57/02/03).

‘중립국’ 외교와 관련하여 모호한 입장을 보이던 조정환 외무부 장관은 1957년 2월 16일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장래에 중립주의를 표방하는 외국의 국민들과 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민간외교의 테두리”에서 관계개선을 시도

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환은 ‘중립국’ 외교 정책이 “최근 갑자기 수립된 것이” 아니라 “건국 시초부터 세워진 기본방책”이었다고 전제했다(동아일보 57/02/17). 조정환의 언급처럼 1948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미 대한민국과 친하게 지내려는 국가와는 누구하고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이는 원칙론이었지 1956년까지 남한 정부는 ‘중립국’을 비판하며 진영외교만을 고수했었다. 따라서 1957년 2월 16일 조정환 장관의 “중립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과도 관계개선을 시도하겠다는 발언은 남한 정부 외교방침의 일대 전환점이었다. 다만 그는 “중립주의 국가의 그릇된 지도자” 및 “표변하는 중립주의 국가”를 ‘중립국’ 외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그 한계도 제시했다(동아일보 57/02/17).

1957년 남한 정부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중립국’이 포함된 동남아시아와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각각 친선사절단을 파견했다. 1957년 3월 18일~5월 13일 남베트남 공사 최덕신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별 친선사절단이 라오스·캄보디아·싱가포르·말라야·보르네오·인도네시아·스리랑카·파키스탄·버마·태국 순으로 총 10개국을 방문했다. 동남아 친선사절단의 순방 목적은 반공진영 강화였다. 최덕신은 순방 결과 보고서에서 순방의 공식 목적이 “한국전쟁 지원에 감사표시 및 우호의사 전달”에 있다고 밝혔다.⁷ 6월 5일 김현철 부흥부장관은 친선사절단의 동남아 국가 순방 목적을 미국의 동남아경제개발기구 설치에 따른 “반공진영 결속과” 미국이 제공하는 “기금 활용의 호혜원칙의 구현을 강조”하는 데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경향신문 57/06/07).

그런데 반동회의의 발기국이자 중립주의를 주도해 온 콜롬보그룹의 다섯 국가 중 유일하게 인도만 제외됐다. 당시 관련 자료에는 인도가 제외된 이유가 따로 설명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남한 정부는 유독 인도만 제외했을까. 앞서 조정환 외무부 장관이 ‘중립국’ 외교를 천명할 때 밝혔던 예외 원칙을 고려해보면 인도가 빠진 이유를 추정할 수 있다. 1957년 2월 ‘중립국’ 외교를 처음으

⁷ 각국 순방 기간은 다음과 같다. 라오스(3. 18~27), 캄보디아(3. 28~31), 싱가포르(4. 1~3), 말라야(4. 4~8), 보르네오(4. 9~13), 인도네시아(4. 14~17), 실론(4. 18~24), 파키스탄(4. 25~5.2), 버마(5. 3~7), 태국(5. 8~13). 『친선사절단 아주 순방, 1957.3.18.-5.13.』, 1957, 아주, 120, 724.41, C-0002.

로 공표하면서 조정환은 '중립주의 국가의 그릇된 지도자' 및 '표변하는 중립주의 국가'를 제외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1957년 3월 1일과 6월 25일 발언에서 인도의 네루와 메논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승만은 한국전쟁 당시 인도는 “네루의 지도하에서 유엔의 중립국가들은 공산 침략군이 다 전패한 것을 다시 허락해서 우리나라 어복을 관할하게 함으로 그들의 체면을 세워 줄 것을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승만은 네루 정책이 “소위 양보하는 주의로 된 것인데 그 결과로 정의라는 것은 전수히 무시되었으며 이 정의가 무시됨으로 말미암아 평화도 다 말살되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승만은 1956년 헝가리사태 때 소련의 헝가리 침공을 지켜봤기 때문에 “인도국의 네루와 크리슈나 메논이 아세아 몇 나라의 대외정책을 거머쥐고 나약하게 만들려는” 중립이라는 “괴홀정책도 무력하게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⁸ 이러한 이승만의 발언 등을 고려하면 남한 정부가 친선사절단 방문국 중에서 유독 인도만 제외했던 까닭은 인도의 네루와 메논을 ‘중립주의 국가의 그릇된 지도자’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1957년 5월 1일~6월 19일, 김정렬 장군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아프리카 친선사절단이 모로코·튀니지·리비아·레바논·사우디아라비아·수단·이디오피아·이라크·이란·아프가니스탄 순으로 총 10개국을 방문했다. 앞선 동남아 친선사절단처럼 중동·아프리카 친선사절단의 사명도 “격렬한 동란을 치르는 동안 우리나라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준 아불리가(아프리카·인용자) 제국 및 중근동제국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이 대통령각하의 우의를 전달하는” 것이었다.⁹

친선사절단장인 최덕신과 김정렬은 순방 이후 이승만 대통령에게 「순방 보고서 요지」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두 보고서 모두 제1 개요(소감)와 제2 일정이라는 동일한 목차에 따라 작성됐다. 최덕신과 김정렬은 공히 방문국에서 우리와 같은

⁸ 이승만, 「제38회 3·1절 기념사」 1957. 3. 1; 「6·25기념사」 1957. 6. 25.

⁹ 각국 순방 기간은 다음과 같다. 모로코(5. 1~6), 튀니지(5. 7~10), 리비아(5. 11~14), 레바논(5. 15~17), 사우디아라비아(5. 18~24), 수단(5. 25~26), 이디오피아(5. 27~31), 이라크(6. 1~4), 이란(6. 5~11), 아프가니스탄(6. 12~19). 외무부 구미과 「친선사절단 중동 및 아프리카 순방, 1957. 5. 1 ~ 6. 19」, 1957, 구미, 119, 724.41, C-0018; 외교무부 보고서 자료에는 9개국만 정리되어 있고 아프가니스탄은 빠져 있다. 당시 단장이던 김정렬(2010: 175-178) 회고록을 참고하여 아프가니스탄 일정을 추가했다.

‘식민경험’을 발견했다고 적었다.

흥미롭게도 최덕신은 본 사절단의 소감을 1. 식민통치의 잔재, 2. 대일(對日) 감정의 악화, 3. 공산주의 위협의 증가, 4. 종교적 결합의 필요성, 5. 인도의 지도자적 입장의 쇠퇴 경향, 6. 자원의 풍부성과 산업의 미개발 등 총 6개항으로 정리했다. 그는 방문한 국가들이 “태국을 제외하고 2차대전이 종결될 때까지 장구한 시일에 걸쳐서” “식민지 상태에” 있으며 몇 국가는 곧 독립을 할 예정이라며 이 국가들의 식민경험에 주목했다. 특히 최덕신은 방문국들 모두 “일본 점령통치가 최악이라고 혹평할 만큼 대일감정이 나쁘다”고 보고했다. 특히 그는 버마 수상 우누의 저서가 “일본 제국주의 통치의” 잔혹한 경험을 잘 저술했기 때문에 “일본이 점령했던 지역에는 모두 통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¹⁰ 이미 최덕신은 1957년 6월 1일 귀국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방문한 국가들이 “모두 우리나라와 같이 2차대전 후 신생한 국가요 해방된 민족이라 우리나라와 흡사한 여러 점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동아일보 57/06/04).

친선사절단장 김정렬도 보고서에서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신생 독립국과 남한을 연결하는 ‘친근함’으로써 공통의 식민경험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김정렬은 모로코 황제는 양국 간의 구체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일시적으로 외국인의 지배하에 있었던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했음을 보고서에 기록했다. 또한 김정렬은 수단에 대해 “역사적으로 외국 지배하에 있던 기간이 긴 이 나라는 독립을 쟁취한 후 중립노선을 일취(一取)하고 있다”는 평가를 보고서에 적시했다.¹¹

흥미롭게도 최덕신은 방문국에서 우리와 유사한 ‘식민경험’에 주목했을 뿐 아니라 식민경험이라는 ‘반식민’을 활용하여 ‘중립국’들을 반공진영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는 외교전략까지 제시했다. 그가 보기에 동남아 지역은 중국의 공산침략과 일본의 침략이 교묘하게 얽혀 있었다. 그가 보기에 이 지역에 “주은래의 미소(微笑) 및 정책은 학교 공장 기타 여러 사회에 여러 가지 형태로 침투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공산주의 세력이 자신의 세력을 부식(扶植)하면서 “일본과 교묘

¹⁰ 『친선사절단 중동 및 아프리카 순방, 1957.5.1.~6.19.』.

¹¹ 『친선사절단 중동 및 아프리카 순방, 1957.5.1.~6.19.』.

하게 협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경험이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반식민을 강조함으로써 반중공(反中共)이자 반공(反共)으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¹²

이처럼 1957년 남한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 친선사절단을 파견함으로써 ‘중립국’ 외교를 시작했다. 그렇다면 왜 남한 정부는 조정환 외무부 장관의 중립주의 나라들과의 관계개선이라는 언급 이후, 실제로 외교사상 처음으로 ‘중립국’이 포함된 지역에 친선사절단을 대거 파견했을까? 1957년 초 조정환은 명시적으로 ‘중립국’ 외교를 실시하는 까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추정컨대 1957년 2월 16일 조정환이 중립주의 국가와 관계개선을 하겠다고 밝힌 이후 친선사절단을 파견한 까닭은 유엔총회에서 한국가입문제에서 기권표 증가라는 표결 결과를 의식했을 가능성이 높다.¹³ 조금 뒤 시기이지만 1957년 11월 조정환은 아시아·아프리카 클럽에 대한 외교 강화책으로서 친선사절단 파견을 모색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경향신문 57/12/01).¹⁴

1957년 남한 정부가 친선사절단을 파견했음에도 제12차 유엔총회에서 기권표 증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11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결의안 제1010호」는 총 80개국 중 찬성 57표, 반대 8표, 기권 9표, 불참 6표로 통과됐다. 그런데 1957년 11월 29일 제12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결의안 제1180호」는 총 82개국 중 찬성 54표, 반대 9표, 기권 16표, 불참 3표로 통과됐다. 기권표가 무려 7표 늘어났다.

¹² 「친선사절단 아주 순방, 1957.3.18.~5.13.」.

¹³ 당시 언론도 실제 1957년 6월 30일 유엔총회에서 한국가입문제가 통과됐지만 기권표가 22표에 달한다는 데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남한 외교부가 외교활동을 펼치기를 주문하기도 했다(경향신문 57/02/02). 신생 독립국의 유엔 가입은 먼저 유엔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되어야 이뤄진다. 그런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소련이 존재했기 때문에 사실상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가입의 실현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실제 6월 30일 유엔총회를 통과된 한국 가입안은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

¹⁴ 익명의 한 심사자는 북한의 ‘중립국’ 외교 접근에 대한 경쟁적 대응 요인을 고려해 보길 제안해 주었다. 본인도 남한의 ‘중립국’ 외교가 분단의 상황에서 북한을 의식하고 ‘체제경쟁’의 맥락에서 나선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남한 정부의 북한과 경쟁의 맥락 속에서 ‘중립국’ 외교의 전개라는 측면은 1958년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1960년대가 되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했다. 그런데 1957년 2월 초 조정환의 발언과 시기상 북한이 ‘중립국’ 외교에 실제 나선 것은 1957년 4월 이후였기 때문에 이 또한 직접적인 요인으로 상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표 4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결의안 표결 대비표(1955~1957년)

회기	표결일	회원국 수	찬성	반대	기권	결석
2	1947. 11. 14	57	43	0	6	8
3	1948. 12. 12	58	48	6	1	3
4	1949. 10. 21	59	48	6	3	2
5	1950. 10. 7	60	47	5	7	1
6	1952. 2. 7	60	51	5	2	2
7	1952. 12. 3	60	54	5	1	0
8	1953. 12. 8	60	55	0	5	0
9	1954. 12. 11	60	50	5	4	1
10	1955. 11. 29	60(76)	44	0	11	5
11	1957. 1. 11	80	57	8	9	6
12	1957. 11. 29	82	54	9	16	3

앞서 주요한이 『동아일보』에 밝힌 우려대로 1957년 2월 제11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의 유엔가입 투표 결과(기권 22표)에서 드러났던 기권표 증대 현상이 이제는 한국문제 결의안 투표 결과에도 이어졌다(외무부 외교연구원, 1967).

1957년 11월 30일 조정환 외무부 장관은 유엔총회에서 가결된 한국문제 결의안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그는 표결원인을 “금번의 한국문제 표결 시에 기권표를 던진 국가는 주로 아·아(亞阿)클럽이며 그들은 공산위협을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공정책에 대한 견해 착오가 있”다는 데서 찾았다. 이어 그는 “아·아클럽에 대한 외교 강화책으로서 친선사절단 파견뿐만 아니라 외교 사절 교환까지도 모색 중”이라고 언명했다(경향신문 57/12/01).

1957년 12월 12일 국회에서 유엔총회에 국회대표로 참석했던 자유당 김법린 의원은 환국인사를 했다. 김법린은 한국문제 표결에서 기권한 16개국 ‘중립국’이라는 사실을 앞으로 외무부가 “외교활동에 있어서”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법린은 ‘중립국’의 기권 투표성향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다. 그는 첫째, ‘중립국’들이 과거 식민지 경험이 있으며, 둘째, 정치적 독립은 했지만 경제적으로 낙후하여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두 진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며, 셋째, 최근 소련의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발사로 공산진영이 자유진영을 앞선다

는 불안감을 제시했다.¹⁵ 그는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중립국'들이 유엔에서 더욱 애매한 태도인 기권 투표를 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김법린은 '중립국'의 중립적 태도의 원인을 반식민·경제발전·공산진영의 우세를 꼽았다. 그의 분석은 앞서 남한 정부 친선사절단이 '중립국'을 방문했을 때 반식민 문제에 주목했던 점에서는 동일했지만, '중립적 태도'를 경제발전을 위한 '양다리'로서 해석한 점이 새로웠다.

1957년 12월과 1958년 1월 남한 여론도 대체로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의 불리한 투표결과와 국제정세를 고려하여 남한 정부가 앞으로 '중립국'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1958년 남한 정부의 '중립국' 외교는 1957년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됐다. 조정환 외무부 장관이 '아·아중립국'과 친선교류를 천명하고 친선사절단을 아시아 지역에 파견했다(동아일보 58/01/19). 1957년에 이어 1958년에도 최덕신 특사가 라오스·버마·스리랑카·말레이시아 4개국을 순방했다.¹⁶ 작년과 달리 사절단이 아니라 최덕신 개인 순방이었으며 방문국 수도 대폭 줄었다. 순방 목적은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와 공산진영 측의 북한 유엔 가입 결의안 시도 저지'였다. 1958년 순방 목적은 작년 친선사절단이 내세운 '감사와 우호 증진'이라는 추상성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유엔가입을 둘러싸고 북한과 경쟁하게 됐다는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결과였다. 즉 1957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북한과 '중립국' 외교를 둘러싼 경쟁적 대응 요인이 이 시기에는 명시적으로 사절단 파견의 목적에 포함됐다.

1959년 1월 14일 제5회 국무회의는 「1959년도 외무부 주요시책」 총 8개항을 수정 후 통과시켰다(신두영, 2006). 다음날 외무부 주요시책은 공보실을 통해 발표됐는데, '중립국'이 명시되지 않은 채 "국제친선의 증진과 외교관계의 강화", "경제외교의 강화", "국제협력의 강화" 등으로 표현되었다(동아일보 59/01/17). 즉 남한 정부는 1957년부터 친선사절단을 '중립국'에 파견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외무부 장관이 '중립국'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정작 1959년 1월 '1959년도 외무부 주요시책'에는 '중립국'이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15 「제3대국회 제26회 정기회의속기록 제58호(1957.12.12.)」, 4쪽.

16 「친선사절단 아주 순방, 1957.3.18.~5.13.」, 1958, 아주, 121, 724.42, C-0002.

1959년 1월 17일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외무부가 발표한 외무시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설은 먼저 정부가 여전히 “외교와 이데올로기를 구별할 줄 모”른다고 질책했다. 사설은 남한 정부가 외교노선이 다른 ‘중립 블록’이라도 배척하지 말고 “외교적인 거래를 해서 유엔 내외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주도록 적극 공작”하기를 요청했다(동아일보 59/01/17).

반면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와 외교노선이 다른 중립주의 국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유진영으로 넘어오게끔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9년 2월 3일 이승만은 “우리나라와 외교적으로 소원한 관계에 있는 일부 아아(亞阿)국가와의 외교접촉이 필요함을 느끼게 하는데 이에 대한 각하의 견해와 신년도 외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라는 기자 질문을 받았다. 이승만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정부는 작년(1958년) 가을에 유엔에서의 표결이 있기 오래전부터 아아(亞阿)국가들의 중요성과 동(同) 국가들이 가지는 특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중대함을 인식하여 왔다. 그 국가들의 일부에 대한 접촉은 이미 2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획득하고 그 목적에 대한 동정을 얻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일부 아아(亞阿)국가들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투쟁의 성질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그 국가들에게 중립주의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으며 또한 기회와 형편이 허용하는 한 그와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체적인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외무부가 이미 외교관계를 확장하고 해외로부터 보다 큰 지지와 친선을 획득하기 위한 시책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기본적인 정책은 변함없이 민주주의와 국제적 균등 그리고 반공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공산주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강하게 반대하지 못하는 국가들에게 원조를 청하지는 않을 것이다.(이승만, 「기자질문에 대한 답변서」 1959)(밑줄은 인용자)

이승만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1957년부터 접촉을 시작했다는 경과를 답변서에서 밝혔다. 다만 그는 접촉 효과가 없는 것은 그들에게 남한 입장을 이해시키고 “동정”을 얻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승만은 남한 정부의 ‘중립국’ 외교의 목표는 “기회와 형편

이 허용하는 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을 설득시켜 자유진영으로 넘어오게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1959년 3월 17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승만은 “아세아인끼리 협력하여 가야 하며 교역의 시초는 의합(意合)에 있는 것이니 외무, 상공이 잘 협의하여 재외 영사나 상인들의 협조를 얻어서 친선을 증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즉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동남아 각국과의 친선강화를 강조했다(신두영, 2006). 그런데 1959년 3월 23일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이승만은 「외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인도를 제외한 동남아 각국에 대해서”만 편지왕래 및 군인 파견, 체육단이나 영화 등 순회를 펼칠 것을 지시했다. 1957년 처음으로 ‘중립국’ 외교를 위해 친선사절단을 파견할 때처럼 1959년에도 여전히 인도를 ‘중립국’ 외교 대상에서 배제했다(신두영, 2006).

1955년 반동회의의 전후 중립주의를 표방하는 ‘중립국’이 대거 등장했다. 이들은 유엔총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결로서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전과 달리 1957년부터 남한 관련한 결의안들에서 ‘기권표’가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처럼 남한 정부는 유엔발 ‘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1957년부터 ‘중립국’ 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매년 친선사절단을 ‘중립국’이 포함된 지역에 파견했다. 그런데 남한 정부는 동남아 친선사절단을 파견하면서도 정작 아시아 ‘중립국’의 핵심인 인도를 제외했다. 또한 외무부 장관은 ‘중립국’ 외교를 표방했지만, 정작 외무부 주요시책에서 ‘중립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외무부가 ‘중립국’ 외교를 전개하는 동안에도 중립주의와 ‘중립국’을 비판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이처럼 남한 정부는 유엔총회에서 기권표 증대라는 위기에 밀려 ‘중립국’ 외교를 시작하긴 했지만 강고한 이분법적 진영외교의 ‘틀’을 고수했다.

IV. 맺음말

1955년 반동회의를 기점으로 세계정치의 주요 세력으로 등장한 ‘중립국’들 상당수는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에 있었다. 냉전의 최전선 남한과 북한 정부는

1957년 ‘중립국’이 포함된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사절단이나 대표단을 처음으로 파견했다. 북한 지도부는 1956년 제3차 당대회에서 반식민·평화를 지향한다면 상이한 체제의 국가와도 대외관계를 맺겠다고 밝혔다. 1956년 하반기 북한 국내외의 복잡한 상황이 정리되자 북한 지도부는 1957년부터 비사회주의의 ‘중립국’들과 ‘양자외교’를 펼쳤다. 그 결과 1957년 북한은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비사회주의의 ‘중립국’ 인도네시아·인도·버마·이집트와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외교적 성과를 달성했다. 1957년은 그야말로 북한에게 ‘중립국’ 양자외교의 해라고 불릴 만했다. 적극적이던 북한 정부의 ‘중립국’ 외교와 달리 남한 정부는 1955년 반동회회가 내세운 반식민·평화·중립을 비판하며 더욱 철저한 진영외교를 추구하다가 1957년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표결 결과가 낳은 충격에 대응해야 했다. 유엔은 남한 정부 정당성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유엔총회에서 증대하는 ‘중립국’들의 기권표는 남한 정부에게 커다란 위기였다. 결국 1957년부터 남한 정부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부 대표가 이끄는 친선사절단을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에 파견했다.

이렇게 1957년은 남·북한 모두에게 정부수립 이후 ‘중립국’ 외교의 실질적인 출발점이었다. 북한의 대외활동은 ‘중립국’과 무역협정 및 문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경제협력 관련하여 적극성을 보인 반면 남한은 유엔에서 발생한 표결 위기에 밀려서 친선사절단을 파견하는 수동적 성격이 컸다. 흥미롭게도 남·북한 주요 인사들은 방문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중립국’들에서 공히 동병상련의 ‘식민경험’을 발견했다. 나아가 그들은 식민경험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대국을 설득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즉 남한 주요 인사와 북한 『로동신문』은 냉전의 최전선이자 탈식민 국가로서 처음 만난 또 다른 냉전의 ‘주변부’로서 ‘중립국’에서 자신들의 식민경험과 같은 약소민족의 동병상련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중립국’을 자신의 진영에 끌어들이는 데 이러한 식민경험을 활용하려 했다. 이처럼 냉전의 ‘주변부’이자 최전선 남·북한은 ‘중립국’과의 만남의 과정에서 냉전과 탈식민은 교차했다.

본고는 남한과 북한이 역사적 과정으로서 어떻게 ‘중립국’ 외교를 시작하여 전개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남·북한 최고 책임자인 김일성과 이승만의 발언을 일부 언급했지만 1950년대 남·북한의 외교정책

의 최고 결정자인 김일성과 이승만의 의도와 외교 전개과정을 '행태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탈식민과 냉전의 교차가 더욱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 시기 독립운동을 펼쳤던 이승만과 김일성은 모두 반식민 경험에 기반한 채 냉전의 시대를 맞이해야 했다. 이 두 인물의 '중립국' 외교의 의도와 선택 그리고 결정 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은 1955년 반동회의를 기점으로 이미 비사회주의의 국가들과 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김일성은 비록 사회주의 진영의 강화를 전제하면서도 민족해방운동이라는 반식민의 관점에서 비사회주의의 국가들과 관계를 맺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승만은 1955년 반동회의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시기 커져 가는 중립주의와 평화의 흐름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흥미롭게도 김일성이 커져 가는 '중립국'들에 대해 민족해방운동이라는 탈식민의 관점에서 접촉했다면, 이승만은 '중립국'들이 적색 제국주의의 세력 확장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가했다. 즉 김일성과 이승만은 모두 미 제국주의와 적색 제국주의라며 냉전의 적인 반대 진영의 상대방을 탈식민의 관점에서 비판했다(김도민, 2020: 제1장, 제2장).

둘째, 이렇게 1955년 전후 시점부터 김일성과 이승만은 '중립국'들에 대한 시선이 상반됐기 때문에 그 두 지도자의 '중립국' 정책 결정 과정도 달랐다. 김일성은 1956년 제3차 당대회에서 명시적으로 비사회주의의 국가들과 대외관계를 맺겠다고 천명했다. 반면 이승만은 남한 외교부가 1957년 동남아·중동·아프리카 내 '중립국'에 처음으로 친선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실질적으로 '중립국' 외교를 시행할 때조차 '중립국'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견지했으며 1959년 2월에야 뒤늦게 이미 2년 전부터 '중립국'들과 접촉해 왔음을 인정했다. 나아가 그는 여전히 '중립국'들이 공산주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여 자유진영으로 넘어오게 해야 한다는 '반공외교' 노선을 고집했다. 물론 김일성도 비사회주의의 국가들에서 발원하는 중립주의는 옹호했지만 사회주의 진영에서 발원하는 중립주의에는 비판적이었다.¹⁷ 즉 김일성도 '중립국'에 옹호적이었지만 그것이

¹⁷ 북한은 1950년대 후반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중립주의를 주창한 유고슬라비아와 헝가리에 대해 비판적이었다(김도민, 2020: 제2장 1-1절).

사회주의 진영을 강화하고 동시에 자본주의 진영과 미 제국주의에 타격을 준다고 판단되는 비사회주의의 ‘중립국’들과 대외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1957년 남·북한은 ‘중립국’과 외교를 실질적으로 시작했지만 김일성은 이미 1956년부터 대외정책으로 결정되고 표방한 반면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뿐 아니라 외교부도 1959년까지도 명시적으로 ‘중립국’ 외교를 표방하지 않았다.

셋째, 이처럼 적극적인 김일성 지도부와 소극적인 이승만 정부가 실질적으로 ‘중립국’ 외교를 시작한 1957년 이후부터 1960년 초까지만을 놓고 보면 그 결과는 북한이 상당히 앞선 측면이 컸다. 앞서 본고에서 살펴봤듯이 김일성은 대외적으로 외교관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역협정을 맺어 무역을 시도했을 뿐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도 여러 문화협정을 체결하거나 양국 내에 각각 친선협회를 설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¹⁸ 반면 남한의 이승만은 ‘중립국’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 그들이 유엔총회에서 기권표가 아니라 찬성표를 던져 주길 바랐다. 심지어 이승만은 동남아의 핵심 ‘중립국’인 인도를 외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1960년 초 시점에서 판단하면 김일성의 ‘중립국’ 외교가 이승만의 ‘중립국’ 외교보다 더욱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¹⁹ 동시에 1950년대 냉전의 어느 한쪽에 서기를 거부하며 새롭게 등장한 ‘중립국’들 상당수가 비사회주의 국가들이었다는 글로벌 냉전의 ‘비대칭적’ 질서하에서, 민족해방운동을 내세우며 탈식민과 미 제국주의 타격을 외치는 김일성의 냉전적 외교정책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반면 이승만은 비사회주의 진영에서 발원하는 ‘중립국’들의 탈식민의 외침을 이분법적 냉전의 대립에서 적색 제국주의인 소련에 유리하게 할 뿐이라며 비판적이었다. 이처럼 김일성과 이승만의 외교적 판단과 정책결정은 1950년대 탈식민과 냉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글로벌한 구조 내에서 수행되는 것이었다.

본고는 냉전 시기 남한과 북한이 1957년 최초로 ‘중립국’ 외교를 실행한 과정

¹⁸ 물론 이 시기 북한과 비사회주의 국가들이 맺은 무역협정과 실질적인 교류의 양은 사회주의 두 강대국인 중국과 소련에 비하면 그 수치는 매우 적었다.

¹⁹ 1960년대 새로 수립된 장면 정권과 박정희 정권은 이승만 정권을 비판하며 명시적이며 적극적으로 ‘중립국’ 외교를 표방 및 실시했으며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의 중요하한 이유로서 북한과 경쟁을 내세웠다(김도민, 2020: 제3장).

을 살펴봤다. 그런데 본고는 남한과 북한의 자료에 기반했기 때문에 실제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의 주요 상대국이던 인도·인도네시아·이집트·알제리 등이 남·북한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드러내지 못했다. 본고에서 밝혔듯이 남한은 '중립국' 외교 대상에서 인도를 아예 제외했으며, 북한은 인도와 적극적으로 외교관계를 맺고자 했으나 '엄정 중립'을 추구하는 인도 외교에 막혀 다른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이 시기 인도의 남한과 북한에 대한 외교는 무엇이었을까? 인도를 포함한 주요 '중립국'들의 냉전 시기 대(對) 한반도 외교정책을 밝히기 위해서는 '중립국'들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관 발굴·조사·수집·번역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들은 추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투고일: 2020년 6월 22일 | 심사일: 2020년 7월 8일 | 게재확정일: 2020년 7월 27일

참고문헌

- 김도민. 2020.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렬, 2010. 『항공의 경종: 김정렬 회고록』, 대희.
- 김준엽 편. 1974~1981. 『북한연구자료집』(1~7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박태호. 198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1』, 사회과학출판사.
-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체제 성립사(1945~1961)』, 선인.
- 서영희. 2018. 『대한제국의 외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근대편』, 동북아역사재단.
- 선즈화 지음. 김동길·김민철·김규범 옮김. 2017. 『최후의 천조: 모택동 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 선인.
- 신두영. 2006.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 시대공론사.
- 신옥희·권현익 엮음. 2019. 『글로벌 냉전과 동아시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외무부 외교연구원. 1967. 『한국외교 20년』.
- 이종석. 1995. 『조선로동당 연구』, 역사비평사.
- 정용욱 편. 2018. 『해방의 공간, 점령의 시간』, 푸른역사.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65년판』.
- 홍석률. 2004. 「중립화통일 논의의 역사적 맥락」. 『역사문제연구』 12.
- Thomas D. C. 2001.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ird World Solidarity*. Westport.
- 『경향신문』, 『로동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외교사료관 소장 외교사료

- [*문서는 다음 순서대로 정리했다. 제목(권차명), 생산연도, 생산과, 등록번호, 분류번호, 톨번호, (파일번호)]
- 『친선사절단 아주 순방, 1957.3.18.~5.13』, 1957, 아주, 120, 724.41, C-0002.
- 『친선사절단 중동 및 아프리카 순방, 1957.5.1~6.19』, 1957, 구미, 119, 724.41, C-0018.
- 『친선사절단 아주 순방, 1957.3.18.~5.13』, 1958, 아주, 121, 724.42, C-0002.

인터넷 자료

- 김영선. 2020. 3. “한-아세안관계 30주년, 신남방정책의 나아갈 방향은?” <http://diverseasia.snu.ac.kr/?p=2377>(검색일: 2020. 6. 21).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 제공: 『동아일보』, 『경향신문』.
- 대통령기록관 소장 대통령 연설기록(<http://www.pa.go.kr>)(검색일: 2020. 6. 21).
- 국회의회록(<http://likms.assembly.go.kr/record>)(검색일: 2020. 6. 21).
- Wilsoncenter(우드로윌슨센터) 디지털아카이브(<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 Wilsoncenter. 1957. “Note about a Meeting on 29 November 1957 between Deputy Foreign Minister Pak Seong-cheol with GDR Ambassador Comrade Fischer and Comrade Behrens.” December 10, 1957,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SAPMO-BA. Translated for NKIDP by Bernd Schaefer.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0011>(검색일: 2020. 6. 21).

Abstract

Diplomacy of South and North Korea towards 'Neutral Countries' during the 1950's

Domi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is a study on the diplomacy of South and North Korea towards 'neutral countries' during the 1950'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rom 1954, the Third Forces emerged, advocating anti-colonialism, peace and neutralism, and refusing to belong to the two camps of the Cold War. In 1957, North Korea entered into trade agreements with major Asian and African neutral countries (e.g., India, Indonesia, Burma, Egypt, and Iraq).

By contras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busy criticizing neutral countries that were leading neutralism and peace movement, because it regarded neutralism and the peace movement that arose from 1954 as offensives by the communist camp.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owever, had to face a considerable drop in the percentage of votes in its favor in the 1957 UN General Assembly vote on the Korea issue. Many of the abstentions were caused by the so-called new independent nations entering the United Nations, claiming 'neutralism.' As a resul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ent the first friendly delegation to Asia and Africa to resolve the voting 'crisis' on the Korea issue at the UN General Assembly. In this wa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passive in its diplomacy towards neutral countries, acting under pressure from the UN diplomatic crisis.

Keywords | Cold War, Postcolonial, Neutral Countries, Foreign Policy, Colonial Experience, Nationalism